

데이트폭력·청소년범죄 증가 속 치안공백 다룰 듯

오늘 광주경찰청 국정감사 이슈는

국정감사에서 경찰들의 기강해이와 비위에 대한 문제점들이 주요 이슈로 오르내린다.

시민의 재산을 지켜야 할 경찰이 오히려 물건을 훔치거나, 술을 마시고 음주상태로 교통사고를 내는가 하면, 범죄자 신병인계 과정에서 놓치는 등 기강해이가 극에 달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슈들이다.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지만 오히려 수사 처리 속도는 늦어지고 있고, 학교폭력은 늘고 있는데 학교폭력전담경찰관 등 경찰 인력은 줄고 있어 지역민들의 치안공백 우려를 높이고 있다.

광주경찰도 다르지 않다. 20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성수사와 기강해이 등이 집중 거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광주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하는 국회의원들

전담수사관 축소 등 대처 안이

조선대 교수비리 수사 지지부진

음주운전 등 기강해이 지적도

은 미흡한 신변보호 조치와 현지경찰관의 음주사건 등 경찰의 해이한 기강을 지적하겠다고 버리고 있다.

지난 7일 광주광역시경찰 소속 A경위는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하던 차량을 추돌했다.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한 모텔에서 도박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 소속 지구대 경찰 2명이 오히려 신고자를 혼계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

하지 않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 광주서부경찰 소속 B경위가 화정동 주상복합건물 주변의 자전거 거치대에 보관돼있던 4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쳤다가 최근 해임됐다. 이외에도 광산경찰 소속 C경감과 D경감은 지명수배자를 신병인계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수갑도 차지 않은 채 도주해 견책처분을 받기도 했다.

국민의힘 정우택 (청주시 상당구)의원은 광주경찰들의 비위 문제에 집중포화를 때릴 예정이다. 정 의원은 지난 5년간(2018~2022년 9월) 북부구역을 위반한 광주경찰은 39명이라고 밝혔다.

조선대 교수 임용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부진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기본소득당 율혜인(비례)의원은 조선대 공연예술무용과 전임교원 채용비리 수사가 수개월째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따질 예정이다.

또 광주지역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경찰의 미흡한 신변보호 조치도

지적한다는 것이 용 의원의 계획이다.

용 의원이 광주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020년 41건에서 2022년 8월 기준 414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광주지역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도 2020년 989건을 제외하고 2018년부터 2022년(8월 기준)까지 매년 1000여건이 넘었다.

2022년 1~8월까지 데이트폭력 피해자 사후모니터링 실시 건수는 1201건이지만, 이 중 스마트워치 지급 등 피해자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는 76건으로 약 6% 수준이었다.

용 의원은 "광주에서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신고가 늘고 있지만 피해자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며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경찰의 전문수사관 부족 문제도 이슈로 지적된다. 치안력 부재 문제가 이어진다는 점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성만(인천시 부평구갑)의원은 광주경찰청의 경우 일정 수준의 시험을 통과한 수

사 전문인력인 '수사 경과' 보유자가 줄고 있다는 점(2020년 1102명→2022년 7월 기준 937명)을 꼬집을 예정이다.

광주지역의 학교전담경찰관(SPO) 감소세도 핵심 이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충북 증평·진천·음성군) 의원은 학교폭력이 늘고 있는 반면 SPO는 줄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광주지역은 청소년 성범죄까지 늘고 있지만 전담경찰관 감소폭은 전국에서 가장 크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역의 학교전담경찰관은 2017년 8월 33명에서 올해 8월 기준 25명으로 감소했다. 현재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학생수는 6791명에 달하고, 1인당 담당해야 하는 학교는 13.6곳이라는 것이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스토킹하면 전자발찌 채운다

'반의사 불벌' 규정 폐지 등 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법원 신고가 내려지지 전이라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신당역 살인 사건' 원인 중 하나로 꼽힌 스토킹 범죄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강화된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집근금지 잠정조치에도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집근금지를 확인해 2차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 불벌' 규정도 폐지해 합의를 빌미로 2차 가해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했다.

가해자가 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어길 경우 내려지는 법정형도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올렸다.

잠정조치·집근금지를 취소·변경·연장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집근금지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도 도입한다.

추가로 증인신문·조사 시 신변 안전조치, 피해자 신원 등 누설 금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 신설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강력 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해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며 "스토킹법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중심으로 법을 전면적으로 개선했다"고 개정안 입법예고의 이유를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열차 내 폭행 처벌 강화 '최대 징역 3년'

국토부 안전강화대책 발표

앞으로 KTX·지하철 등 열차 안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하도록 형량이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열차 내 폭행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한 '열차 내 안전강화 대책'을 19일 발표했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열차 내 금지행위에 '폭행'을 추가해 승무원이 직접 제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차역에서 열차 밖으로 문제 승객을 내보내 철도경찰에 인계할 수도 있다.

철도 승무원에게는 보디캠을, 철도 경찰에는

기존 테이저건·가스분사기에 더해 고무탄총을 지급해 열차 내 폭행사건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승차권 앱 하단에는 '신고하기' 버튼을 만들어 누구나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열차 안에 KTX 같은 고속열차와 전동차에 각자 내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철도경찰 인력을 늘려 열차 승무원을 현재 7% 수준에서 30%까지 높이기도 했다.

해당 안전강화 대책은 철도안전법 개정안 제출과 국회 통과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실제 처벌 강화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지구 사랑하는 마음

광주시 북구 효동초등학교 학생들이 19일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적은 피켓을 들고 북구 청광장까지 걷는 길거리 캠페인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6·25 전후 강진·무안서 민간인 71명 희생"

진실화해위 '80년 광주MBC 기자 인권침해 사건' 등 3건 규명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는 19일 한국전쟁 당시 강진과 무안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사건 2건에 대해 '민간인 71명이 희생된 사건'이라고 진실을 규명했다.

또 1980년 광주MBC 기자가 언론보도로 연행돼 불법 구금을 당한 사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18일 제43차 회의를 열고 '강진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무안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1980년 광주MBC 기자 인권침해 사건' 등 총 3건의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강진 민간인 희생사건'은 1950년 8월 초부터 1951년 7월 초까지 강진지역에서 비무장 민간인 43명이 인민군, 지방 좌익, 빨치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희생자들은 경찰과 공무원 및 그 가족, 우익인사와 그 가족, 부유하다는 이유로 희생됐고, 3명을 제외한 40명이 가족으로 확인됐다.

'무안 희생사건'은 1950년 9월 말부터 같은 해 10월 초까지 인민군이 퇴각하던 시기에 무안군에서 마을 주민 28명이 현지 실정을 잘 아는 좌익 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희생자들이 공무원, 이장, 우익인사와 그 가족,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기독교마을(마을주민의

80%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학살이 자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1980년 광주MBC 기자 인권침해 사건'은 1980년 1월 광주MBC 기자이던 신정인이 '광주 자유총연맹 권총도난 사건 범인 검거' 보도로 505보안대에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정인에게 적용한 계엄포고 1호는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505보안대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을 구금하고 감압적인 수사를 한 점은 국민의 헌법상 보장된 영장주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침해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이라면서 "국가가 신정인의 명예와 피해를 회복시키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hb@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